

## 융합, 인문학의 살 길인가

| 박찬길 |

### 1. ‘융합’은 왜 문제가 되는가?

‘융합’은 인문학 분야에서 매우 생소한 단어다. 이제는 익숙해진 ‘인문학의 위기’ 담론에서도, 미국의 현대어문학회 국제색인(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같은 인문학 관련 영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융합’(Convergence)은 딱히 의미있는 키워드가 아니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은 요즘 한국의 인문학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소재어가 되었다.<sup>2)</sup> ‘융합’에 대한 한국 인문학계의 각별한 관심은 인문학

---

朴贊吉 이화여대. 최근 논문으로 「낭만적 엘레지와 애도의 정치학: 셸리의 『에도네이즈』 읽기」(2014)가 있다.

- 1) 구글의 엔그램 뷰어(Ngram Viewer)에 ‘인문학과 융합’(Convergence/the Humanities)을 검색해보면 198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인문학에 관한 가장 폭넓은 색인인 엠엘에이 국제색인에 ‘인문학과 융합’을 색인어로 넣어보면 1990년 이후 68건에 불과하다. 특히 프로젝트 뮤즈(<http://muse.jhu.edu>)나 제이스토어(<http://www.jstor.org>) 같은 영문학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같은 색인어로 검색해보도 특별히 의미있는 논문이 검색되지 않는다.
- 2) 대조적으로 ‘융합’에 대한 우리 인문학계의 관심은 폭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학술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RISS에 ‘인문학 융합’을 검색해보면 459건의 학술지 논문이 검색된다. 약 5년의 시차는 있지만, 김문조의 연구에 따르면 인문학 분야의 융합 관련 학술지 논문은 1990년대까지 전무하다가 2000년대 들어 폭증했다. 김문조·신은보 「한국에서의 인문사회분야 융합 연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위음 『융합연구: 이론과

내부보다는 기업, 정부, 과학기술계 등 인문학 외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장면이지만,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자신의 신제품 아이패드를 소개하면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 인문학적 소양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역설하면서 정부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인문학 열풍이 불었다.<sup>3)</sup>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도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선도해온 것은 과학 쪽이었다.<sup>4)</sup> “통섭론”으로 잘 알려진 최재천 교수는 진화생물학의 원리를 원용하여 인문학까지 포괄하고자 하는 시도로 대표적인 인문융합론자로 이름을 알렸다.<sup>5)</sup> 카이스트(KAIST)는 인문사회 계열의 단과대학을 “인문사회기술융합대학”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포항공대에서는 일찍부터 ‘인문기술융합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다.<sup>6)</sup> 최근

실제』(법문사, 2013) 170면.

- 3) 스티브 잡스의 아이패드 신제품 발표회는 2011년 3월 2일에 열렸다. <https://www.youtube.com/watch?v=KlI1MR-qNt8>, 이 발표 이후 한국의 정부와 산업계에서 주도한 ‘인문학 열풍’은 한국의 인문학이 ‘중흥’과 ‘빈곤’을 동시에 경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로는 『경향신문』 김종묵 기자의 연속기사 「인문학 열풍, 명과 암」에 잘 요약되어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serial\\_list.html?s\\_code=ac170](http://news.khan.co.kr/kh_news/khan_serial_list.html?s_code=ac170). 이러한 ‘인문학 열풍’의 결과물인 ‘아이폰 인문학’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는 서동진 「절망의 인문학: 스티브 잡스 인문학의 정체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8022> 참조.
- 4) 학문간 융합에 관한 우리 학계의 논의를 개괄할 수 있는 연구로는 김광웅 엮음 『융합학문, 어디로 가고 있나?』(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홍성욱 엮음 『융합이란 무엇인가?』(사이언스북스, 2012), 그리고 앞에 언급한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엮은 『융합연구: 이론과 실제』 참조.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에 관한 논의는 김영식 『과학, 인문학 그리고 대학』(생각의나무, 2007); 김영식 『인문학과 과학: 과학기술 시대 인문학의 반성과 과제』(돌베개, 2009); 이인식 엮음 『인문학자, 과학기술을 탐하다: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고즈원, 2012); 이인식 『지식의 대응합: 인문학과 과학기술은 어떻게 만나는가』(고즈원, 2008) 참조. 특히 이인식은 1979년부터 2008년까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에 관한 국내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문헌목록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지식의 대응합: 인문학과 과학기술은 어떻게 만나는가』 446~53면.
- 5) 최재천·주일우 엮음 『지식의 통섭: 학문의 경계를 넘다』(이음, 2007). 통섭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은 이인식 엮음 『통섭과 지적 사기: 통섭은 과학과 인문학을 어떻게 배신했는가』(인물과사상사, 2014) 참조.
- 6) 포항공대에 기반을 둔 인문융합론자의 저서로는 박이문 『통합의 인문학: 동지 철학을 향

에는 정부가 공인하는 석학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학술원에서도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가진 바 있다.<sup>7)</sup> 대학의 인문학부를 마치 실업자 양성소같이 취급해오던 정부와 과학계 인사들이 인문학에 이렇듯 갑작스레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대학에서 직장을 잡고 있는 대부분의 인문학 전공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계의 뜬금없는 구애가 마땅치 않으면서도 마냥 무시할 수만도 없게 되었는데, 그것은 ‘융합’에 대한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때문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인문사회 기반 학제간 융합연구 지원사업’을 공동연구 과제로 설정하여 지원해왔으며,<sup>8)</sup> 올해에는 개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과학기술·인문 융합연구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공모 중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는 별도로 교육부에서도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인데, 그 ‘사업’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특성화”나 “산학협력” 등의 이름으로 인문학적 연구와 교육의 ‘응용’ 또는 ‘변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산업계나 과학계에서 일관되게 요구하는 인문학의 ‘융합’과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령 올해 공모·시행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만 해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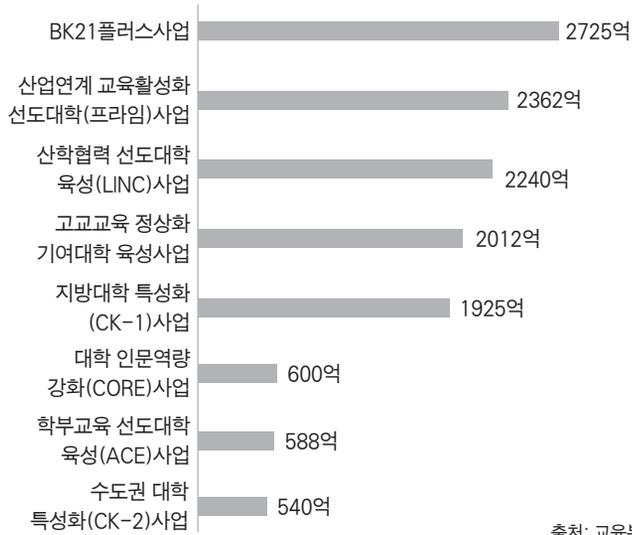
하여』(지와사랑, 2009); 이진우 『테크노인문학: 인문학과 과학기술, 융합적 사유의 힘』(책세상, 2013)이 있다. 박이문 교수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자연과학에 의한 인문학의 통합이 아니라 인문학에 의한 자연과학의 통합을 주장한다. 박이문, 같은 책 209~18면.

7)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만남」(제41회 국제학술대회 대한민국학술원 자료집, 2014). [http://www.nas.go.kr/data/nas/list.jsp?NP\\_Code=10000036&NP\\_DataCode=20000007](http://www.nas.go.kr/data/nas/list.jsp?NP_Code=10000036&NP_DataCode=20000007).

8)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엮음 「한국에서의 인문학기반 융합 연구」, 앞의 책 183~207면.

9) 「연 2조 원 대학 지원, ‘독이 든 성배’되면 안 된다」, 『중앙일보』 2016년 4월 21일. <http://news.joins.com/article/19921688>. 이 글의 도표들은 이 기사에서 인용.

올해 교육부 주요 대학재정 지원사업(단위: 원)



출처: 교육부

출잡아 2조가 넘는 돈을 교육부가 대학에 직접 제공한다고 하니, 2011년 이후 등록금을 거의 올릴 수 없었던 대학들로서는 이러한 교육부 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금은 현금의 가치로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축적되는 여러가지 지표들이 곧바로 대학의 평가와 연관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대학의 총장들에게는 이 사업의 '수주' 여부가 그대로 경영실적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 그 결과가 발표된 프라임(PRIME)사업은 지원액 규모가 한 학교당 최대 3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 정부의 이런 '선물'은 물론 공짜일 리 없다. 교육부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분명했다. 대학에 입학할 고교졸업생의 숫자가 현재 대학정원보다 적어지는 시점이 곧 다가오며(2018년), 이때를 대비해서 대학정원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노동시장의 수급을 고려할 때, 현재 과잉 공급되는 인문사회계, 특히 인문계의 규모를 축소하고, 이공계, 그중에서도 공학계의 졸업생을 시급하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원 축소 또는 정원 이동 정책을 실행하는 대학에 정부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언해왔다.<sup>10)</sup>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금 획득에 사활을 건 각 대학들은 매우 급작스러운 방식으로 공학계열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구조조정을 약속했다. 그 결과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인문계열은 일정 수의 정원(대형 200명 이상, 소형 200명 미만)을 고스란히 공학계열에 내줘야 했던 것이다. 한편 프라임사업으로 축소 조정된 인문계열을 위해서는 코어(CORE)사업을 신설하여 연간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물론 프라임사업과는 무관하게 인문학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요구하는 핵심 요건은 다른 무엇보다도 참여를 원하는 인문대학이 기존의 교과과정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새롭게’ 구성했는가 하는 것인데, 바로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융합’이다. 코어사업에 선정되는 몇개 대학의 인문학부는 일정한 지원액을 받게 되지만, 그 선정의 핵심 관건은 예의 그 ‘창의적’ 교과과정이 그들이 생각하는 ‘융합’의 취지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가 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10) 노동시장 수급에 관한 이러한 정부의 예측은 통계로서도 결함이 많다. 올해 초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학계 졸업자의 비율은 23.9%로 이미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고, 우리나라보다 2~3배의 경제규모를 가진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10년간(2005~15) 인문계를 4509명(9.7%) 감축했고, 공학계열은 7015명(9%) 증원했지만, 2011~14년 사이의 전공별 취업률 변동추이를 보면, 공학계열(-2.8%)이 오히려 인문계(-1.6%)보다 1.2%나 더 많이 하락했다. 이수연 「정부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공대 증원, 타당한가?」, 『현안보고』 8 (대학교육연구소, 2016년 1월 13일). <http://khei-khei.tistory.com/1646>.

## 2. 인문학의 융합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정부가 바라는 융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돌이켜보면 이전에도 인문학과 관련하여 ‘융합’이라는 용어가 쓰이긴 했다. 이전에는 ‘융합’이 인문계 학과들의 통폐합을 위해 여러 학과들을 한데 합쳐놓고 두루뭉술하게 붙여놓은 이름이거나, “문학”을 좀 덜 “인문학스러운” “문화”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외국어문학과를 그 지역의 문학이나 어학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연구하는 지역학으로 바꾸는 것을 느슨하게 지칭하는 것이었다.<sup>11)</sup> 그 이전의 “융합”에 대한 요구는 말하자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문학에게 요구하는 “창씨개명”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번에 말하는 “융합”은 호적상의 개명만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 같다. 교육부가 내놓은 코어사업의 지침은 인문대의 개편 모델로 모두 다섯가지를 제시했는데,<sup>12)</sup> 최소한의 모양새를 위해 ‘기초학문심화’라는 영역을 하나 포함하긴 했지만, 다른 것들은 인문대의 편제를 더욱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지역학’은 외국어문학부의 어문학 중심의 교과과정을 아예 ‘지역학’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기초교양 모델’은 기존의 인문대학을 교양과목을 전담하는 ‘교양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경우는 학사 단위로서 인문대학이 폐지되고 인문대의 전공이 없어지며, 인문대 교수는 전공교수가 아니라 교양과목 전담 교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진 “대학 자체” 모델 역시 기존의 인문학 커리큘럼과는 다른 요소의 도입

11) 줄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문학,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안과밖』 26 (2009 하반기) 287~88면.

12)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기본계획」(교육부 공고 제2015-288호).

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문대학을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것은 인문학의 축소 또는 폐지를 시도했던 몇몇 대학에서 이전부터 이미 있어왔던 일이기도 하다.<sup>13)</sup>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인문기반 융합전공’ 부문은 다른 항목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이 항목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다양한 학문이 결합한 융합전공’을 개발함으로써 ‘창의인문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코어사업 지침서에는 인문학부 ‘융합’의 목적과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인문기반 융합전공

- 인문학과 경영, 디자인, IT, CT 등 다양한 실용학문을 융합하여 사회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체제로 발전
  - 기본원칙: 인문대학이 주관하여 공학·경영학·사회과학·예술관련 전공 등과 결합된 융합 교육과정 및 관련 학위과정 개설
- ※ 해외사례: 옥스퍼드 PPE, 하버드 SS, 코넬(윤리학+사회학+생물학), 게이오(언어지+신체지)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융합”의 특징은 무엇보다 인문학에 “실용학문”을 “융합”시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 마음속의 인문학은 “실용학문”이 아니고, 따라서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인문학의 그러한 ‘결합’을 보완하기 위하여 좀더 실

---

13) 예를 들어 광운대는 2006년에 국문과·영문과·중국학과·일본학과와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등 5개 학과를 통합해 2008학년도에 동북아대학을 신설할 계획을 세웠다가 논란 끝에 국문학과와 영문학과는 존치하고 별도의 단과대학 대신 동북아문화산업학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용적인 ‘실용학문’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그리 낮은 것이 아니다.<sup>14)</sup> 인문학이 주로 고전적 텍스트들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소양을 닦는 데 주력하는 것이니만큼 장래의 취업을 위해서는 인문학에 없는 실용적 지식도 아울러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인문교육의 ‘실용성’이란 특정 직업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갖춘 민주적 시민을 기르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은 잠시 제쳐놓더라도,<sup>15)</sup> 적어도 이번에 교육부의 코어사업 지침서에 나오는 ‘융합’에 대한 요구는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가령 대학에서 ‘융합’적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융합’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융합을 뜻해야 옳다. 바로 그러한 융합을 위하여 우리는 오래전부터 부전공·복수전공·이중전공, 심지어 자유전공 등의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학생들이 4년간 받는 교육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융합’이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 그 교육을 받는 단위, 또는 단일 전공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른 무언가와 내용적으로 ‘융합’해야만 융합교육이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런데 코어사업의 지침에 등장하는 해외의 융합 사례를 실제로 살펴보면 개별 전공 자체의 단위가 특정한 방향으로 ‘융합’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옥스퍼드대학의 PPE(Philosophy, Politics & Economics)는 정치계나 언론계 같은 공공영역에 진출하려는 학생들

14) 졸고, 앞의 글 287~90면.

15) 인문학의 ‘실용성’에 관해 미국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논의로는 스탠리 피시(Stanley Fish)가 기고한 두편의 신문칼럼과 그에 대한 반응들 참조. “Will the Humanities Save Us?,” *New York Times* (Jan. 6, 2008) <http://opinionator.blogs.nytimes.com/2008/01/06/will-the-humanities-save-us/>; “The Uses of the Humanities, Part Two,” *New York Times* (Jan. 13, 2008) <http://opinionator.blogs.nytimes.com/2008/01/13/the-uses-of-the-humanities-part-two>.

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이 전공은 별도의 학사조직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교육과정 자체를 보면, 철학·정치학·경제학을 정확하게 그 대로 배우는 것이지 교육내용에 다른 요소가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다. 즉, 우리의 연계전공처럼 교육과정의 모듈만 새롭게 설정할 뿐 각각의 과목 자체에서 내용적인 ‘융합’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sup>16)</sup> 이 점은 하바드대학의 사회연구(Social Studies) 과정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심오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한 것인데, 여기에 역사학·정치학·사회학·경제학·인류학·철학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융합’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주요 전공을 망라한 연계전공에 가깝다. 오히려 이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특별한 승인을 받지 않으면 타 분야, 가령 경영학·법학·자연과학 등 이질적인 전공과의 이중전공이 허용되지 않는다.<sup>17)</sup> 한편 ‘코넬(윤리학+사회학+생물학)’이라고 표현한 프로그램은 아마도 코넬대학(University of Cornell)의 과학기술학과(The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에서 개설하는 두 전공, ‘과학기술학’(Science & Technology Studies)과 ‘생물학과 사회’(Biology and Society)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 전공들은 옥스퍼드대학이나 하바드대학의 경우보다는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융합’에 더 가까운 모델이긴 하다. 이 ‘융합’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의미를 묻는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수학·화학·생물학 등 기초과학과 과학사를 가르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연과학과 기술에 대한 사회역사적 담론이라는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이에 필요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 과목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각 과목들의 내용을 뒤섞는 것은 아니

16) <http://www.ppe.ox.ac.uk/index.php/why-study-ppe-at-oxford>.

17) [http://static.fas.harvard.edu/registrar/ugrad\\_handbook/current/chapter3/social\\_studies.html](http://static.fas.harvard.edu/registrar/ugrad_handbook/current/chapter3/social_studies.html).

다. 다시 말하자면, 이 경우에도 수학이면 수학, 생물학이면 생물학인 것이지 그 과목 자체가 전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sup>18)</sup> 코어 지침서의 마지막 예로 나오는 게이오대학 프로그램은 이른바 “언어지”와 “신체지”를 “융합”한다고 하는 교양과목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참여적이고 실험적인 강좌를 통해 지성과 신체적 감각이 상호적으로 정제되고 통합되는 수업으로서 대학의 수업에 핵심적인 언어적 소통능력과 사회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비언어적 소통능력을 통합적으로 배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의 강좌는 약 1주일간 진행된 ‘비틀스: 가사와 음악과 몸’이라는 수업이었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은 비틀스의 음악과 가사에 관한 교수의 강의를 듣고, 그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한 후, 그것을 출발점으로 창작발표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9)</sup> 이러한 수업이 진정으로 “언어지”와 “신체지”를 “융합”하는 새로운 차원의 지식을 만들어내는지,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지식이 과연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 걸맞은 깊이를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교육부가 모범사례로 들고 있는 해외의 프로그램들은 모두 다 특정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개발된 연계전공 성격의 교과과정이며, 그런 뜻에서 우리 교육부가 생각하는 ‘융합’의 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 해외 프로그램의 실질적 내용이야 어떻든 이번 코어사업에서 “인문기반 융합전공”으로 인정받으려면 “융합전공 자체 개설과목”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고, 그것은 “특정 학과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학위 자체를 “융합전공”으로 수여할 것을 못 박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되는 것은 “인문+경영” “인문+디자인” “인문+디지털” 등인데 그러한 “융합”의 목적은 해외 사례들처럼 특정한 교육목적이 아니라 단지 “취업 연계

18) <http://sts.cornell.edu/undergraduate/bio-scoc-major>.

19) <http://en.lib-arts.hc.keio.ac.jp/education/culture/knowledge>.

의 활성화”로 명시되어 있다. 인문학 교육도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일반론에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실용성이어야 하는지, 또 그것이 실행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좀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 대목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인문학 교육을 “진흥”하고 “지원”한다는 명분을 가진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는 인문학 교육의 내용을 비인문학적인 방향으로 희석하고, 인문교육의 정체성을 교란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sup>20)</sup>

설령 이런 종류의 ‘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런 식의 ‘융합’이 학생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굳이 교육의 공급자인 대학의 전공단위에서, 개별 강좌들의 내용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이며, 이러한 주장이 인문학의 제도적 정당성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킬 것임은 분명하다. 국내의 한 연구자는 교육부의 의뢰로 수행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의 최종보고서에서 한편으로는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강화를, 또다른 한편으로는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분과학문 체제의 극복”을 주장하고 있다.

인문학 내의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역시 연구 및 교육 단위가 되고 있는 분과학문 체제의 극복이다.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현재의 분과학문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사한 성격의 학과는 최대한 하나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1)</sup>

---

20) 김유신 교수(전기전자공학·과학사)는 이른바 “융합형 인재”란 아주 특수한 천재들에게만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이른바 “융합적” 교육방식은 “전문성이 없는 얼치기를 배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김유신 「융합 연구에 대한 과학철학적 접근」,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위임 『융합연구: 이론과 실제』(법문사, 2013) 40면.

21) 홍병선 「인문학 교육 실태 분석 및 진흥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2011) 168면.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 PopUp.do?research\\_id=1341000-201100117](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 PopUp.do?research_id=1341000-201100117).

이 보고서의 결론에 따르면, 인문대학의 경우는 조직적으로는 교양 학부로 해체모여를 하는 것이 옳고, 내용적으로는 다른 분야와 적극적인 융합을 도모하는 것이 이른바 ‘인문학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교양교육의 강화라는 명분으로 인문대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교육부 관료들이나 과학기술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내부에서도 소수의 동조자들을 얻어가는 상황이다. 인문대학이나 인문학부가 인문교양 과목들을 좀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당 전공학생들뿐 아니라 전 분야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인문교양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백번 맞는 말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 인문학 전공과목과 인문학 교양과목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사회의 변화된 수요를 고려하면 전자보다는 후자를 중시하는 것이 맞고, 가능하다면 전자는 아예 문을 닫고 후자에 전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유익하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sup>22)</sup> 이것이 예의 그 ‘인문융합론’과 결합되면 결국 ‘인문학 전공과

22) 송승철 교수는 ‘교양인문학’이 ‘분과전공으로서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아예 인문대학을 해체하고, 인문대 교수들이 교양교육원을 접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송승철 「인문대를 해체하라!: ‘전공인문학’에서 ‘교양인문학’으로」, 『안과밖』 34 (2013 상반기) 172면. 송교수의 인문대철폐론은 19세기에 옥스브리지(Oxbridge) 중심의 고전교육을 비판하면서 실용적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자들의 대학개혁론을 오늘날 한국 대학의 맥락에서 전체주의적인 관료의 목소리로 담아낸 데 불과하다. 아이러니한 것은 송 교수가 철폐를 주장하는 자기 자신의 ‘분과전공’ 영문학이 바로 공리주의자들의 실용적 문학교육론으로부터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돌이켜 보면 고전문학 교육에 대한 ‘실용적 대안’으로 제시된 영문학이 교양교육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고전문학과를 제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문학 스스로가 고전문학의 전문성을 획득하는 일이었다. 줄고 「초기영문학의 발생과 전개」, 『안과밖』 22 (2007 상반기) 10~35면. 송 교수의 “교양인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반론으로는, 김명환 「오늘의 한국 영문학 혁신의 길」, 『안과밖』 39 (2015 하반기) 155~66면. 한편 전인한 교수는 위와 같은 송승철 교수의 논의를 이어받아 한국의 “전공인문학”이 “현실과의 교섭”에 실패했음을 비판하면서 전통적인 인문학의 분야 구분을 전적으로 폐기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전인한 교수는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전문가 위주의 전통적인 전공인문학” 대신 이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문학”의 도래를 단

목’을 ‘인문학 교양과목’으로 전환시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과학기술처럼 좀더 실용성 있는 분야와 화학적으로 ‘융합’하라는 요구로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교육부의 이러한 의도는 코어사업의 지침에서 “기초교양대학” 항목에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 항목은 직접적으로 ‘융합’을 권하고 있지는 않지만, ‘융합’의 자연스러운 제도적 결과를 미리 보여준다. 이 개편 모델은 한마디로 인문대학을 폐지하고 기초교양대학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적어도 이 모델을 채택하는 대학에서는 인문학이 전공으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으니, 인문학 전공 교수들은 전공을 접고 기초교양과목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라는 취지다. 인문학의 본령이 인문적 교양을 두루 갖춘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권고가 언뜻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침대 길이에 맞춰 잡아온 행인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잘라

---

언하면서, 웹 3.0시대에 이미 모습을 드러낸 “참여·공유·개방을 통한 집단지성”이 “근대적 대학학문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인한 「시력 약한 박쥐의 아름다운 퇴장: 새로운 인문학의 출현을 고대하며」, 『안과밖』 39 (2015 하반기) 135~36면. 전 교수의 주장은 인문학이 그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문학 내부자의 냉소적인 자기반성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사실상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1964년에 맥루한(Marshall McLuhan)이 비문자적 미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1990년에는 전통적인 영문학자였던 커넨(Alvin Kernan)이 더이상 자신이 아는 영문학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음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1994년에는 버커츠(Sven Birkerts)가 구텐베르크 문자시대의 영원한 종언을 이미 알린 바 있다.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McGrawHill, 1964); Alvin Kernan, *The Death of Literature* (New Haven: Yale UP, 1990); Sven Birkerts, *The Gutenberg Elegies: The Fate of Reading in an Electronic Age* (London: Faver and Faver, 1996). 하지만 그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현재에도 활자문화에 근거한 문학이라는 제도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고, 전자책이 종이책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했다. 문학연구의 환경이 디지털시대를 맞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일부 학자들의 말처럼 이른바 디지털 인문학이 전통적인 인문학을 대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문학은 분명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양상은 일부 학자들의 호들갑에서처럼 죽음이나 종언이 아니라 적응과 변화에 더 가깝다. 디지털 인문학의 과장된 수사에 대한 최근의 비판은 Adam Kirsch, “Technology Is Taking Over The English Departments: the false hope of the digital humanities,” *New Republic* (May 3, 2014) <https://newrepublic.com/article/117428/limits-digital-humanities-adam-kirsch> 참조.

내어 죽였다는 아티카의 노상강도 프로크루테스(Procrustes)의 논리와도 같은 것이다. 교육부 관료의 입장에서는 인문대학의 낮은 취업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없애버리는 일일 것이다. 인문대폐지론은 그러한 단세포적 발상의 가장 급진적인 표현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모든 대학에 인문학 부문이 전공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학의 전구성원에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리들이나 그에 동조하는 일부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양’인문학은 교양대학으로 살리고 ‘전공’인문학만 없애자는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전공’인문학과 범주적으로 구분되는 ‘교양’인문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내용이 쉬우면 교양이고 어려우면 전공인가? 아니면 영어는 교양이고 영문학은 전공인가? 자명한 사실은 그러한 구분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억지춘향으로 그런 구분을 한다고 해도 이른바 ‘교양인문학’은 ‘전공인문학’의 지속적인 뒷받침 없이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문대학은 인문교양 교과목의 못자리와 같다. 못자리를 없애면 옮겨 심을 모가 애당초 존재할 수 없음을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 3. 교육부의 ‘인문기반 융합’, 정말 ‘인문기반’일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을 계기로 느닷없이 한국의 모든 인문학 연구자들의 내키지 않는 화두가 된 ‘융합’은 사실상 인문학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학문적 ‘융합’은 학계에서 거의 대부분 과학기술 쪽의 주도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지만, 교육부의 사업에 등장하는 ‘인문기반 융합’은 딱히 그

리한 학문적 논쟁의 결과라고도 볼 수 없다. 우리나라 교육부의 정책 입안은 앞에서 소개한 학계의 논쟁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교육개발원이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같은 국책연구소나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기업연구소의 정책보고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sup>23)</sup> “인문기반 융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코어사업 지침 역시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학계의 학문적 논의보다는 최근에 이루어진 다양한 정책연구에서 가져온 것 같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연구소에서 발행한 「2010 세상을 바꾸는 생각들: 학문간 융합 포럼 리포트」라는 문건을 보면 코어사업 지침서의 융합이 어떤 개념적 지형을 갖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sup>24)</sup>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상을 바꾸는 생각들”이 필요한 이유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세계 시장을 리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sup>25)</sup> 이 보고서가 상정하는 “생존”이란 인간이나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한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개인적·사회적 “생존”은 곧 시장에서의 “생존”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은 그러한 “생존”을 지향하는 기업들의 노력에 전방위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진 학문적 ‘융합’을 이

23) 코어사업 공고문의 맨 첫 부분 “추진배경 및 필요성”, 그중에서도 제일 첫 항목의 주석의 출처가 바로 삼성경제연구소다. 인용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등 통계적 분석기법으로 는 예측이 곤란한 현상에 대해 인문학적 통찰력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문학은 미래 경영환경 예측 활용에 매우 위력적인 도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에 관한 최근 정책보고서로는, 강남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정책보고서, 2008년 9월 20일); 황주성 외 「ICT·인문사회융합」(정보통신정책연구원 현안연구 2011-06); 박찬욱 「인문학 융합의 현상진단 및 정책 방향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3-54).

24) 「2010 세상을 바꾸는 생각들: 학문간 융합 포럼 리포트」(한국산업진흥기술원, 2010).

25) 같은 글 10면.

론적으로 정초하기 위해 몇가지 이론적 논거를 동원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기술융합(Kodama, Rosenberg), 디지털융합(차원용, 이기원)과 관련된 것이며, 인문기반 융합과 연관해서는 미학 분야의 심광현 교수의 연구를 주로 원용하고 있다. 심 교수는 에드워드 윌슨과 최재천 교수가 설파한 “통섭”을 “복합” “학제간” “통합” “융합” 등의 유사 개념과 더불어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기 자신은 마티스(Henri Matisse)의 그림 「원무」(Dance)가 상징하는 비환원주의적 “통섭”을 주장하고 있다.<sup>26)</sup> 심 교수가 주장하는 “통섭”은 “분과적 고유성과 학제적 횡단성의 이중성을 유지, 심화하는” 이른바 “T”형 연구 방식으로 “이질적 분야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을 더욱 깊이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마티스의 그림 「원무」가 상징하는바, “함께 뛰기”를 상징적 지표로 설정하면서 예술장르 간의 통섭, 예술과 인문학의 통섭, 예술과 기술 간의 통섭, 그리고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통섭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특히 인문학과 과학기술 간의 통섭은 “개념과 기능 간의 통섭”으로서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을 매개로 한 지식 데이터베이스의 재범주와 확장”이라고 설명했다.<sup>27)</sup> 인문학과 과학기술 간의 통섭에 관한 심 교수의 설명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그 성격이 매우 기능적이다. 그것은 이러한 이질적인 분야들 간의 “통섭”이 결국은 “예술과 과학기술” 간의 궁극적인 통섭으로 이행되는 “중간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sup>28)</sup> 심광현 교수의 이러한 인문학 통섭론은 결국 “예술

---

26) 같은 글 11~32면.

27) 심광현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식생산과 문화정치: 예술-학문-사회의 수평적 통섭을 위하여』(문화과학사, 2009) 199~244면.

28) 같은 책 214면.

과 과학기술” 간의 통섭으로 수렴되는 과정에 놓인 한 단계에 불과한데, 이 보고서에서는 심 교수가 통섭론을 전개하는 전체적인 의의와 맥락을 무시한 채 인문학과 과학기술 간의 통섭을 “확장된 데이터베이스”로 규정하는 기능주의적 정의만을 따로 떼어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인용하는 또다른 ‘융합론’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기술중심적 융합을 지향하는데, 코다마(Fumio Kodama)의 “기술융합”(Technology Fusion),<sup>29)</sup> 로젠버그(Nathan Rosenberg)의 “기술융합”(Technological Convergence),<sup>30)</sup> 차원용의 “디지털융합”(Digital Convergng)<sup>31)</sup> 등에 대한 설명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불가피해지는 기술융합의 중요성을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강조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적 융합의 불가피성과 그에 근거한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결국 아이폰과 같은 성공적 제품의 생산을 주도할 ‘기술인재’의 양성으로 귀결되며, 그것은 결국 다음 면에 제시한 도표의 내용으로 귀착한다.

코어사업에서 제시한 ‘융합’에 가장 가까운 이론적 배경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코어사업의 공고문에 등장하는 “인문기반 융합전공”은 말이 ‘인문기반’이지 실제로 뜻하는 바는 다음 그림이 보여주는 ‘기술기반 융합전공’과 전혀 다르지 않다. 좀더 큰 그림에서 보면 코어사업에서 강조하는 ‘융합’은 새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지식의 생성이라는 창의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아이폰과 같은 ‘융합제품’에 필요

---

29) Fumio Kodama, *Emerging Patterns of Innovation: Source of Japan's Technological Edge*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5).

30) Nathan Rosenberg, “Technological Change in the Machine Tool Industry, 1840-191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3,4 (Dec, 1963) 414~43면.

31) 차원용 「제4차 산업융합포럼」(지식경제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표자료 2006년 6월 19일).

## 융합사회를 이끄는 기술인재 육성 필요



출처: 「세상을 바꾸는 생각들: 학문간 융합 포럼 리포트」 10면.

한 ‘융합기술’을 습득한 ‘융합인재’의 양성이라는 산업적 목표를 지향한다.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인용한 보고서 「세상을 바꾸는 생각들: 학문간 융합 포럼 리포트」의 두번째 장이 이러한 ‘이론’에 입각한 융합교육의 국내 사례(연세대의 경우는 “기업에서 원하는 융합형 기술인재상 분석”)로 이루어져 있고, 세번째 장의 제목이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융합인재상”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코어사업의 인문학 지원이 대기업의 요구에 맞춰져 있음은 이미 감추고 싶은 비밀도 아니다.

### 4. 교육부의 ‘인문융합론’, 어떻게 대응할까?

우리 정부가 말하는 ‘융합’이 인문학의 실용성을 입증하라는 과학주의·공리주의의 전통적인 주장의 현대적 표현이라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현대적 상황에 걸맞아야 할 것이다. 스노우(C. P. Snow)

의 요구에 고압적 태도로 일관한 리비스(F. R. Leavis)처럼<sup>32)</sup> 우리 역시 냉소와 경멸로만 대응한다면 우리는 리비스보다 훨씬 혹독한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 뻔하다. 과학기술에서 요구하는 ‘인문융합’, 즉 ‘기술융합적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기능주의적이고, 탈정치적이며, 공리주의적이고, 또한 자본친화적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육부의 융합교육 프로그램 역시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목표를 대학 교육과정에 관철하려는 자본가·기업가들의 노력은 우리 생각보다 그 역사가 길고, 앞으로도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sup>33)</sup>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선 인문학은 그 성격상 다른 분야와는 다른 ‘실용성’을 지향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의 ‘실용성’은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본질적인 삶의 가치를 지향하며, 인문학은 그러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인성을 길러냄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sup>34)</sup> 다시 말하면, 건강한 비판적 지성과 역사적 통찰력, 예술적 감성, 세계

32) F. R. Leavis, *Two Cultures? The Significance of C. P. Snow* (Cambridge UP, 2013). 당대에 많은 비판을 받은 리비스의 입장을 리비스의 맥락에서 설명한 글로는 Guy Ortolano, *The Two Cultures Controversy: Science, Literature and Cultural Politics in Postwar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P, 2009).

33) 예를 들면, 18세기 독일의 계몽군주들도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대학에서 전통적인 인문학 대신 경영학(Management)이나 창업(Entrepreneurship)을 가르칠 것을 강요했고, 칸트(Immanuel Kant)와 실러(Friedrich Schiller)도 이러한 실용주의적 대학개혁의 피해자였다. 19세기 초반 옥스브리지의 개혁을 주장했던 공리주의자들의 입장도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었다. Frederick C Beiser, "Romanticism," *A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ed. Curran, Randall R, Wiley (Maldon, MA: Blackwell, 2003) 130~41면. 20세기 초반에도 유명한 미국의 부호 카네기(Andrew Carnegie)는 한 대학의 졸업식 치사에서 "졸업생들이 셰익스피어나 호머와 같은 죽은 언어를 읽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속기와 타이핑을 배웠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낀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Frank Donoghue, *The Last Professors: The Corporate University and the Fate of the Humanities* (New York: Fordham UP, 2008) 4면.

34) 인문학의 '실용적' 가치에 관한 논의는 셀 수 없이 많다. 최근의 예로는 Bryan Boyd, "Arts, Humanities, Sciences, Uses," *New Literary History* 44.4 (2013 Autumn) 575~94면.

시민적 도덕성을 두루 갖춘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을 키워내는 것이 21세기에도 인문학이 여전히 담당한 사회적 역할인 것이다.<sup>35)</sup> 가령 미국의 인문학도 수십년째 ‘위기’라며 아우성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의 인문학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한 건전한 미국시민을 키워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미국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미국사회의 건강성을 지켜나가는 첩경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sup>36)</sup>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인문학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전세계의 학계에서 수없이 나왔지만, 최근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위축을 우려한 미국의회가 미국학술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보고서 「사물의 핵심」(“The Heart of the Matter”)은 인문학에 관한 미국의 공식적 입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별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과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어떻게 변화를 이해하고 이끌어가겠는가? 우리가 사는 곳과 다른 사회와 문화, 다른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겠는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포함하는 완전히 균형있는 교과과정은 통합적인 사고와 상상력, 창의력과 발견, 건전한 시민정신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단지 선택과목이거나 엘리트주의적인, 또는 엘리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즉각적이고 도구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과거와 미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그것은 어려운 시기든 번영의 시기든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35) Helen Small, *The Value of the Humanities* (Oxford: Oxford UP, 2013) 174~83면.

36) Martha C. Nussbaum,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P, 2010).

우리의 지원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설립자들이 설명한 대로, 그것은 우리가 삶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하다. 그것은 사물의 핵심이다.<sup>37)</sup>

미국정부의 인문학 정책이 진정으로 이러한 이념적 지침을 따른다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만하다. 하지만 미국의회가 이러한 보고서를 의뢰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인문학 역시 이러한 정신과는 사뭇 다른 어떤 요인들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비판을 하고 비분강개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 비판이 옳고 우리의 분노가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해도, 그것이 당장 우리의 현실을 바꿔놓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그리고 구조조정과 연계된 재정지원은 인문학 내부의 비판적 의견과는 큰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대학이라는 기관에 속한 채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한, 그러한 정책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분노와 냉소로 모든 것을 외면하는 학문적 러다이트(Luddite)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실행할 수 있는 보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요컨대, 우리에게는 인문교육과 인문학 연구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인문학과 연관된 정책적 사안들 각각에 대해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이러한 ‘소동’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우리 나름의 인문학적 통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한 통찰을 하려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

37) *The Heart of the Matte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for a Vibrant, Competitive, and Secure Nation* (American Academy of Arts & Sciences, 2013) 61면. [http://www.humanitiescommission.org/\\_pdf/hss\\_report.pdf](http://www.humanitiescommission.org/_pdf/hss_report.pdf).

있는 위치, 우리가 하는 일의 사회적 쓰임새, 우리의 존재나 행위에 대해 인문학 외부에서 갖는 불만, 인문학 외부에서 제시하는 해결책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연구와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또 기회가 있을 때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기본적으로 친자본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안에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다. 가령 인문학 교수들의 연구업적 평가의 방식을 인문학의 특성에 맞게 바꾼다든지, 또는 인문학의 ‘진흥’이나 ‘지원’의 핵심을 기업처럼 예산을 지원하고 단기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문학 교수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나간다는지 하는 것들이다.<sup>38)</sup> 교육부는 공리주의적 실용성만 추구하는 이상한 ‘사업’들을 자꾸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인문학의 본질에 맞는 연구를 뒷받침하도록 재정지원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가령, 독일정부의 교육부가 “인문학에 대한 지원은 연구자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선언한 것을 우리 교육부도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sup>39)</sup> 기본적으로 학술적 연구와 교육은 경쟁이 아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을 평가하고, 무엇보다 그러한 비교-평가에 근거한 무제한의 ‘경

38) 줄고 「인문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안과밖』 37 (2014 하반기) 48~109면.

39) 독일은 2007년을 인문학의 해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인문학 캠페인을 벌였다. 이것도 사실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우월한 대학’(Excellent Universities)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인문학 부문을 달래기 위한 성격도 있어서, 우리의 프라임-코어사업의 진초전을 보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문학 지원의 기본 정신은 진지하게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The Year of the Humanities-An Overview*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Germany, 2007). <http://www.bmbf.de/en/7189.php>. 출처 『미국과 독일의 인문학 지원정책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89면.

쟁'을 학술-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은 인문학과 인문교육을 죽이는 일이다. 국가는 당연히 인문학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훔볼트(Wilhelm Humboldt)의 말처럼, '지원'은 하되 절대로 그 내용에 '개입'해서는 안된다.<sup>40)</sup> 우리는 그 점을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환기하면서, 인문학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이 긴 싸움에 인내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

40) 졸저, 같은 책 3~6면.